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도 개선

| 양미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실태
3.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관련 의견
4. 정책 제언
5. 기대 효과

참고문헌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도 개선¹⁾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SUMMARY

- 공공형어린이집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교사 처우 개선과 운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함.
- 지정 이후 보육 프로그램 다양화, 교사 전문성 향상, 영유아 환경 개선, 부모 부담 경감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 학부모 만족도가 높고(평균 4.8점), 97% 이상이 계속 이용 의향을 보여 제도의 신뢰성이 확인됨. 그러나 지정 및 운영기준 중 일부 항목의 중복과 불필요성이 지적되어 기준 간소화와 지원단가 현실화가 필요함.
-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격차를 완화하고, 공보육 기반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1) 본 글은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공공형어린이집 성과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양미선·김나영·장인수·윤소정, 2024)」 중 보고서에 수록하지 않은 일부 결과를 중심으로 작성함.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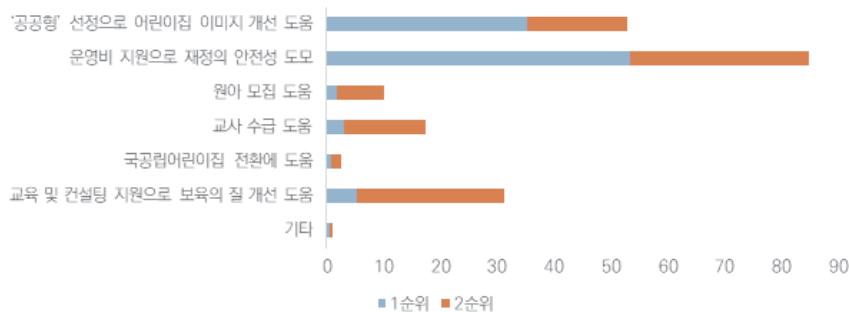
- ▶ 정부는 2010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안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제도 도입함(이혜진, 이승희, 오유정, 2016).
 - 2011년 7월 ‘공공형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시작으로(보건복지부, 2011) 2012년 9월부터는 본 사업으로 전환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옴.
- ▶ 그러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역대 정부의 공보육 정책 방향에 따라 확대와 축소를 반복함.
 - 공공형어린이집을 공보육 체계의 일환으로 인정하며 재정지원을 확대했으나(보건복지부, 2013), 문재인 정부는 지원 대상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등으로 한정하여 사업 규모가 축소됨(보건복지부, 2018).
 -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민간어린이집에 재정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어가고 있음(보건복지부, 2022).
- ▶ 하지만 지방이양 이후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을 담당하게 되면서, 지정·운영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의 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 본 고에서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기준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2**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실태****가. 공공형어린이집 현황**

- ▶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집 중 37.6%는 2011~2015년, 18.6%는 2016~2018년, 23.2%는 2019~2021년, 20.7%는 2022년 이후에 지정받음.
 - 민간어린이집은 2011~2015년이 49.2%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시작된 초창기에 지정받은 어린이집이 절반 가까이 되고, 나머지는 10~20% 사이임.
- ▶ 공공형어린이집이 최근 재지정 받은 시기는 2022년에 재지정 받은 어린이집이 33.5%로 다수를 차지하고, 2024년이 29.2%, 2023년 24.9%, 2021년 12.4% 순임.
 -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2022년에 재지정 받은 비율이 각각 32.8%,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2023년 100%, 법인단체 등은 2024년이 50.0%로 많음.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참여 이유를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운영비 지원으로 재정의 안전성 도모가 84.9%, ‘공공형’ 선정으로 어린이집 이미지 개선 도움이 52.9%,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보육의 질 개선 도움 31.3%, 교사 수급 도움 17.3%, 원아 모집 도움 10.1% 순임.

[그림 1]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참여 이유: 1+2순위



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 ▶ 중앙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2024년 기준 10개 지정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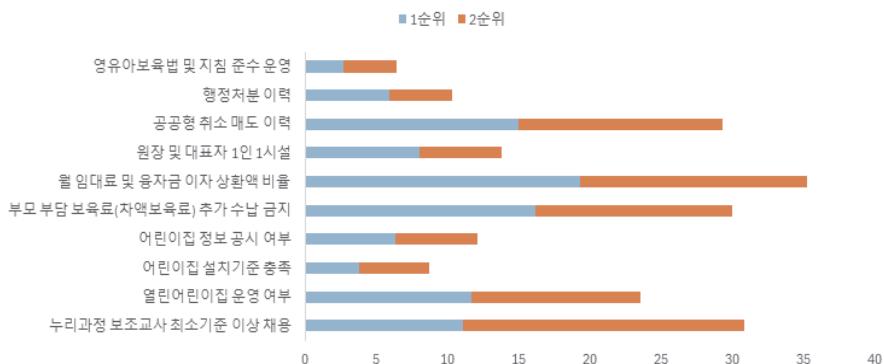
- 10개 항목 중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이 적절(적절+매우 적절)하다는 의견이 93.5%,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92.7%, 어린이집 설치기준 총족 91.7%,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89.6%, 행정처분·처벌 이력 85.4%,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84.0% 순임.

[표 1] 현행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본항목 구성의 적절성: 개요

구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	적절	매우 적절	계(수)	단위: %(명), 점	
1. 영유아보육법 및 지침 준수 운영	0.1	0.8	5.5	31.5	62.0	100.0(711)	4.5	
2. 행정처분·처벌 이력	2.0	2.0	10.7	32.2	53.2	100.0(711)	4.3	
3. 공공형 취소·매도 이력	3.4	4.4	14.8	30.0	47.5	100.0(711)	4.1	
4. 원장 및 대표자 1인 1시설	1.1	1.5	7.7	24.3	65.3	100.0(711)	4.5	
5. 월 임대료 및 융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2.1	3.7	14.3	33.5	46.4	100.0(711)	4.2	
6. 부모부담보육료(차액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5.2	5.9	14.9	28.3	45.7	100.0(711)	4.0	
7.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0.1	0.3	6.9	33.8	58.9	100.0(711)	4.5	
8. 어린이집 설치기준 총족	0.3	0.3	7.7	32.1	59.6	100.0(711)	4.5	
9.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1.5	1.4	13.1	31.5	52.5	100.0(711)	4.3	
10.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2.8	2.1	16.7	34.3	44.0	100.0(711)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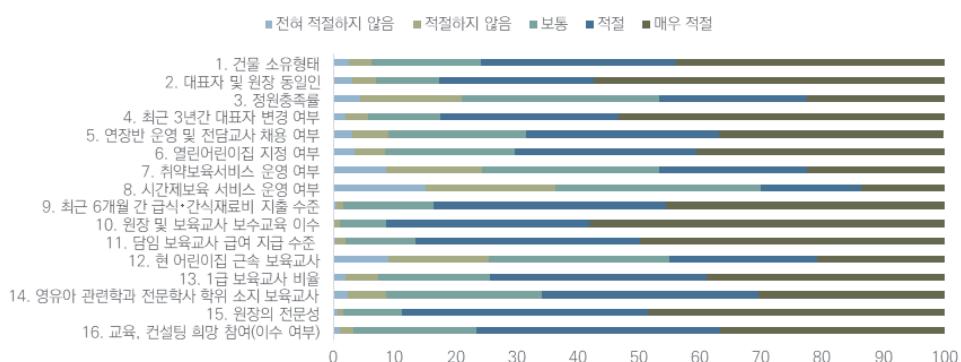
- ▶ 기본항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월 임대료 및 응자금 이자 상환액 비율 35.2%,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 기준 이상 채용 30.8%, 부모부담 보육료(차액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30.0%, 공공형 취소 매도 이력 29.3%, 열린어린이집 운영 여부 23.5% 순임.

[그림 2] 기본항목 중 불필요 항목: 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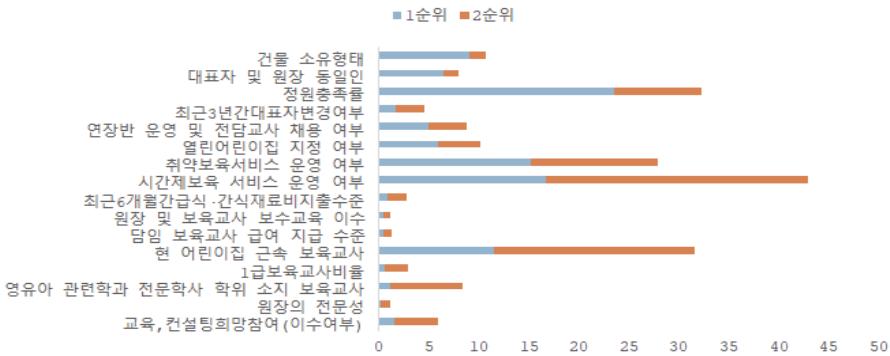
-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의 적절성을 알아본 결과, 16개 항목 중 적절(적절+매우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가 91.3%, 원장의 전문성이 88.7%,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 86.6%,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수준 83.6%,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와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이 각각 82.6% 순임.

[그림 3]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의 적절성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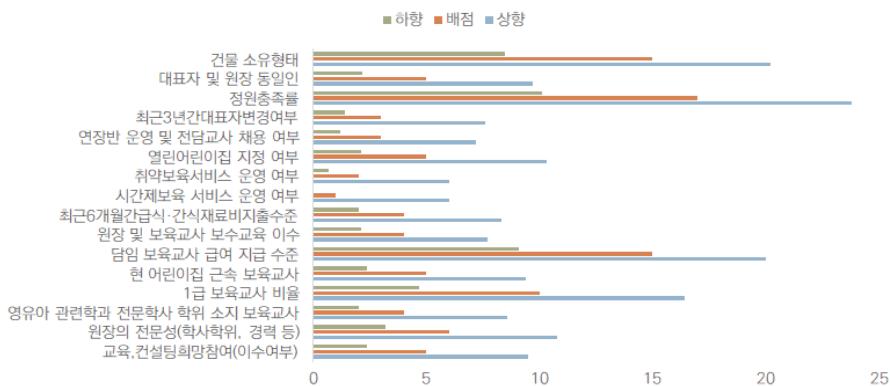
-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 42.9%, 정원충족률 32.2%,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31.6%,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27.9%, 건물 소유형태 10.7%,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10.1%,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학위 소지 보육교사 8.3%, 대표자 및 원장 동일인 8.0% 순임.

[그림 4] 기본항목 중 불필요 항목: 1+2순위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별 배점의 적절성을 추가적으로 알아본 결과, 16개 항목 중 배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최근 6개월간 급식간식 재료비 지출 수준에 대한 배점(4점) 75.2%,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 수준에 대한 배점(15점) 74.3%,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에 대한 배점(4점) 72.9%, 교육, 컨설팅 희망 참여(이수 여부) 배점 72.0% 순임.
- 자율평가 항목별 배점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는 31.5%, 원장의 전문성 28.4%,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24.2%, 담임교사 급여 지급 수준 20.8% 순임.
 - 반대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항목은 시간제보육 서비스 운영 여부가 57.1%로 가장 높고, 정원충족률 53.7%,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47.1%,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44.3% 순임.

[그림 5]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별 적정 배점



- 지역별 자율평가 항목별 배점을 현재보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 적정 점수로 건물 소유 형태(15점)는 8.5점, 정원충족률(17점)은 10.1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수준(15점)은 9.1점으로 현재보다 6~7점 정도 낮은 점수 제시함.

-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건물 소유형태는 20.2점, 정원충족률은 23.8점, 담임 보육교사 급여 지급수준은 20.0점을 제안함.

다. 공공형어린이집 재정지원 및 적정 지원단가

1) 정부 재정 지원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재정 지원 유형을 알아본 결과, 공공형 어린이집 모두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과 교육환경개선비를 지원받고 있고, 조리사 인건비 67.7%, 공공형어린이집 활성화 운영비 56.7%, 유아반운영비 39.7%, 환경개선비 26.6%, 부모부담보육료 (차액보육료) 12.4%, 차량안전도우미 인건비 5.1% 순임.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월 지원받는 지원금 규모는 1개소당 평균 421.9 만원을 지원받고 있음.

2) 보육교사 급여 수준

- ▶ 어린이집 중 88.5%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답하였고, 7.5%는 경력 상관없이 동일 급여를 지급하며, 4.1%는 기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음.
- ▶ 조사 참여 어린이집 중 과반수 이상인 60.4%는 정부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18.0%는 어린이집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 17.8%는 지역 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지급기준, 3.8%는 지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 보육교사 급여의 1호봉 승급기간과 승급 시 월급여 인상분은 1호봉 승급기간은 평균 2.8년임.
 - 1호봉 승급 시 급여 인상분은 월평균 4.1만원 수준이며, 5만원이 33.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4만원 23.2%, 1만원 17.0%, 2만원 15.5%, 6만원 이상 11.1% 순임.

[표 2] 1호봉 승급기간 및 승급 시 월급여 인상분

구분	1호봉 승급기간						승급 시 월급여 인상분						계(수)
	1년	2년	3년	4년 이상	평균	1만원	2만원	3~4 만원	5만원	6만원 이상	평균		
전체	46.0	22.4	18.8	12.8	2.8	17.0	15.5	23.2	33.2	11.1	4.1	100.0(711)	단위: %(명), 년, 만원
어린이집 유형													
민간	46.4	22.9	18.7	12.0	2.7	16.5	15.1	26.3	31.8	10.3	3.9	100.0(358)	
가정	45.4	22.1	19.0	13.5	3.0	17.2	16.1	20.1	34.8	11.8	4.3	100.0(348)	
사회복지법인	-	-	100.0	-	3.0	-	-	-	-	-	5.0	100.0(1)	
법인·단체 등	75.0	-	-	25.0	2.3	50.0	-	25.0	-	25.0	2.8	100.0(4)	
F				7.6(9)	0.7				11.1(12)		0.8		

구분	1호봉 승급기간						승급 시 월급여 인상분						계(수)
	1년	2년	3년	4년 이상	평균	1만원	2만원	3~4만원	5만원	6만원 이상	평균		
어린이집 규모													
20인 이하	45.4	21.6	19.4	13.7	3.0	16.9	16.1	20.5	34.4	12.0	4.4	100.0(366)	
21~39인	54.9	10.8	21.6	12.7	2.8	26.5	10.8	21.6	24.5	16.7	4.2	100.0(102)	
40~79인	42.0	29.8	19.3	8.8	2.4	16.0	17.7	28.2	30.9	7.2	3.5	100.0(181)	
80인 이상	46.8	24.2	9.7	19.4	3.2	4.8	12.9	27.4	46.8	8.1	4.4	100.0(62)	
F				21.0(9)*		1.6			29.3(12)**		1.7		
지역규모													
대도시	45.6	19.5	20.9	14.0	2.9	15.8	16.3	24.7	33.5	9.8	4.0	100.0(215)	
중소도시	45.5	25.3	18.2	11.0	2.8	19.3	15.5	19.3	34.8	11.0	4.2	100.0(336)	
농어촌	47.5	20.0	17.5	15.0	2.9	13.8	14.4	29.4	29.4	13.1	4.1	100.0(160)	
F				5.0(6)		0.1			9.4(8)		0.2		

* $p < .05$, ** $p < .01$.

▶ 공공형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72.3%임.

- 예산을 추가 편성한 경우 각종 수당 지급 목적이 48.1%, 급여(기본급) 이상 31.5%, 교사 연수 및 연구비 배정 17.3%, 기타 3.1% 순임.

3) 유아반 운영비

▶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유아반 운영비의 주 사용처를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교재교구비가 41.5%로 가장 많고, 급간식비 27.8%, 보조교사 인건비 24.8%, 행사비 22.0%, 특별활동 강사비 10.8%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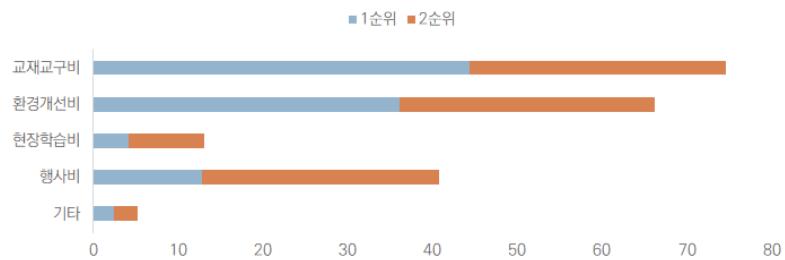
[표 3] 유아반 운영비 주 사용처: 1+2순위

구분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 교구비	특별활동 강사비	현장 학습비	행사비	급간식비	기타	단위: %(명)	
								1순위	2순위
1순위	14.1	11.5	2.5	1.7	5.2	7.7	57.2	100.0(711)	
2순위	10.7	30.0	8.3	8.0	16.8	20.1	6.1	100.0(363)	
1+2순위	24.8	41.5	10.8	9.7	22.0	27.8	63.3	(711)	

4) 교육환경개선비 주 사용처

- ▶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비의 주 사용처를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교재교구비가 74.6%로 다수를 차지하고, 환경개선비 66.2%, 행사비 40.8%, 현장학습비 12.1%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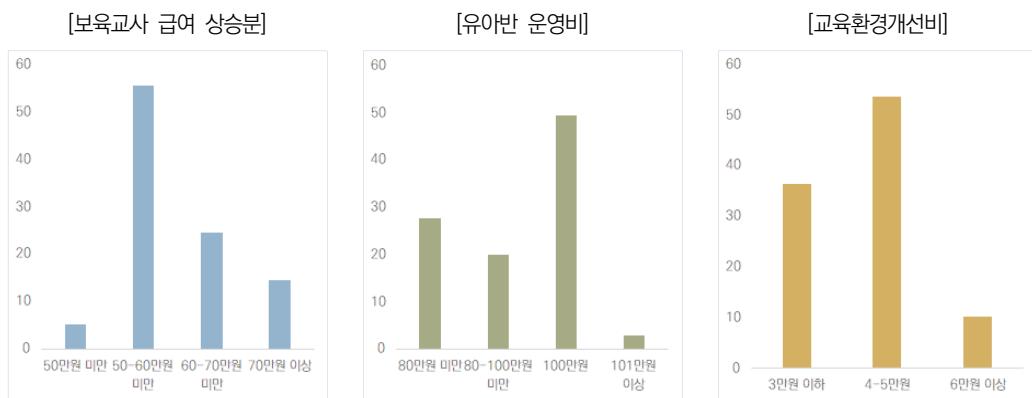
[그림 6] 교육환경개선비 주 사용처: 1+2순위



5) 지원단가의 적절성

-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지원단가가 적절('대체로 적절'+‘매우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4%, 유아반 운영비 지원단가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39.0%,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단가가 적절하다는 비율은 27.5%임.

[그림 7] 적정 지원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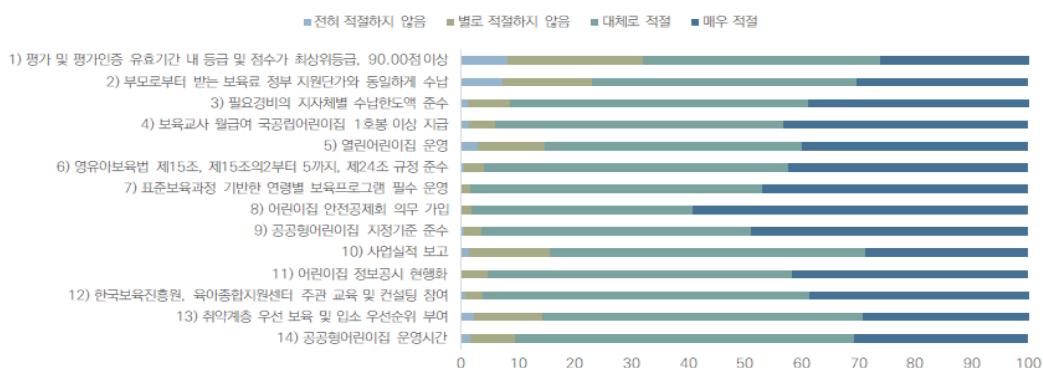
-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의 적정 지원단가로 평균 57.4만원, 유아반 운영비 적정 지원단가로 85.3만원, 교육환경개선비 적정 지원단가로 아동 1인당 월평균 8.1만원을 제안함.

라. 운영기준의 적절성 및 개선사항

1) 운영기준의 적절성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14개 항목 중 표준보육과정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필수 운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98.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 가입이 98.2%,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 지원센터 주관 교육 및 컨설팅 참여 96.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준수 96.3%, 어린이집 정보공시 현행화 95.3%, 보육교사 월급여 국공립어린이집 1호봉 이상 지급 93.9%, 필요경비 지자체별 수납한도액 준수 91.5%,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시간 90.6% 순임.

[그림 8]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의 적절성 개요



2) 삭제 및 개선 필요 운영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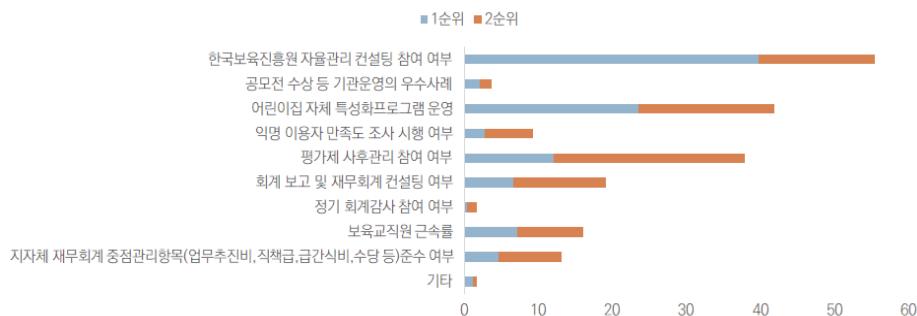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운영기준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등급 및 점수가 최상위등급, 90.00점 이상이 52.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실적 보고 31.2%, 열린어린이집 운영 20.3%, 기타 시도 운영기준 - 취약계층 우선 보육 및 입소 우선순위 부여 19.6% 순임.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등급 및 점수가 최상위등급, 90.00점 이상 항목이 5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실적 보고가 25.1%, 열린어린이집 운영 18.2%, 나머지는 기타 시도 운영기준 순임.

3) 운영기준 추가 및 대체 항목

-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에 추가할 항목으로, 대부분 추가할 운영기준이 없다고 답하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임.
- ▶ 평가제로 개편됨에 따라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기준에 적용되고 있는 평가기준을 대체할 기준을 1, 2순위로 조사한 결과, 한국보육진흥원 자율관리 컨설팅 참여 여부가 55.5%, 어린이집

자체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41.9%, 평가제 사후관리 참여 여부 37.9%, 회계보고 및 재무회계 컨설팅 여부 19.1%, 보육교직원 근속률 16.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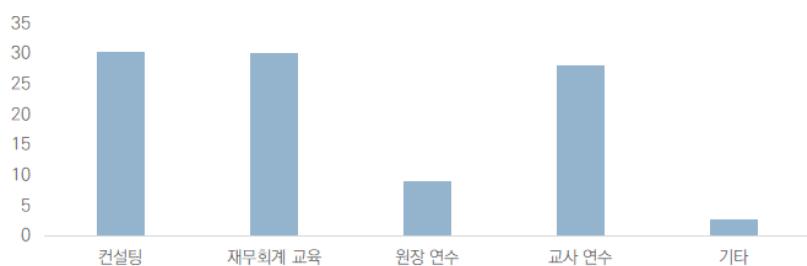
[그림 9] 평가대체 기준: 1+2순위



마. 공공형어린이집 질 관리

- ▶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 참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 83.7%가 재무회계 운영관리 컨설팅, 69.2%가 품질관리교육(원장/교사 연수), 59.5%는 운영기준 운영관리 컨설팅, 58.1%는 품질관리교육(자율 선택형), 12.4%는 자율학습공동체에 참여함.
- ▶ 한국보육진흥원 품질관리의 도움 정도로 대부분 도움 되었다고 답하였고, 도움 정도는 평균 3.6~3.7점 사이로 나타남.
 - 특히, 운영기준과 재무회계 운영관리 컨설팅 사업에 대한 도움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공공형어린이집의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으로, 컨설팅과 재무회계 교육이 각각 30.2%, 30.1%, 교사 연수가 28.0%, 원장 연수 8.9%, 기타 2.8% 순임.

[그림 10] 공공형어린이집 품질 개선 위해 필요한 지원



바.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주요 변화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주요 변화를 어린이집 운영, 보육교사, 영유아 및 부모 등 3개 측면에서 알아봄.

- 어린이집 운영 측면에서 24.1%가 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향상, 21.7%가 교사의 전문성 향상, 19.4%는 교사 이직 감소, 17.9%는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개선, 8.6%는 우수 인력 확보, 4.8%는 정원충족률 상승, 1.5%는 대기 아동 수 증가 순임.
- 교사 측면에서 교사 자존감 상승이 25.9%, 교사 전문성 향상 21.9%, 경력에 따른 급여 인상 13.5%, 비금전적 복리후생 2.4% 순임.
- 영유아 및 부모 측면에서 보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향상이 47.5%, 교사의 질 향상이 19.8%, 부모 부담 경감 16.0%, 시설설비 등 어린이집 환경 개선 15.8% 순임.

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질 개선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어린이집 물리적 환경 등 6개 항목에 대한 개선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6개 항목 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투명성, 보육프로그램의 질,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급·간식의 질,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순으로 개선(어느 정도 개선+매우 개선) 되었다는 비율이 높고, 개선 정도는 5점 평균 4.3~4.5점 사이로 나타남.

[표 4]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이후 개선 정도 개요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개선되지 않음	별로 개선되지 않음	보통	어느 정도 개선	매우 개선	계(수)	평균
어린이집의 물리적 환경	0.1	1.3	11.8	45.9	40.9	100.0(711)	4.3
급·간식의 질	0.3	0.1	10.7	36.7	52.2	100.0(711)	4.4
보육프로그램의 질	-	0.1	7.3	41.2	51.3	100.0(711)	4.4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0.3	0.1	5.6	40.2	53.7	100.0(711)	4.5
어린이집 재정 운영의 투명성	-	-	7.3	32.8	59.9	100.0(711)	4.5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0.4	0.8	8.6	35.6	54.6	100.0(711)	4.4

3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실태 및 관련 의견

가. 공공형어린이집 인지

- ▶ 공공형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영유아 부모에게 자녀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전에도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를 알아본 결과, 31.6%는 잘 알고 있고, 35.3%는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함.
- ▶ 공공형어린이집의 인지 경로는 지인이 42.1%, 인터넷 23.5%, 아이사랑 임신출산육아포털 14.1%, 육아종합지원센터 5.9% 순임.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 인지 여부에 대해 59.9%가 잘 알고 있고, 37.0%는 대략 알고 있으며, 3.1%는 전혀 모른다고 답함.

나.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경험 및 만족도

-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된 이유로, 자녀의 연령 진급으로 해당 연령반이 없어서 21.1%,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옮기고 싶어서 18.8%, 집과의 거리가 멀어서 14.1%, 보육 교직원에 대한 불만족 10.7%, 보육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이 9.4%의 순임.
- ▶ 자녀가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을 선택한 이유를 1, 2순위로 알아본 결과, 보육교사가 우수해서 52.9%, 교육·보육 프로그램이 우수해서 47.1%, 공공형어린이집이라서 38.9%, 특별활동이 많아서 14.7%, 급·간식이 우수해서 11.9%, 운영시간 적절 10.8% 순임.
- ▶ 자녀가 현재 다니는 공공형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교육·보육 프로그램 등 8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8개 항목 중 시설설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4.6점으로 가장 낮고 교육·보육 프로그램, 교사, 위생 및 건강관리, 안전한 보호, 운영시간, 이용 비용 모두 평균 4.8점으로 높게 나타남.

다. 공공형어린이집 질 격차에 대한 인식

- ▶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간의 차이에 대해 46.2%는 전혀 차이가 없고, 47.5%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으며, 6.3%는 매우 차이가 많다고 답함.
 -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34.2%가 교육·보육 프로그램, 21.6%는 이용 비용, 21.1%는 시설설비(물리적 환경), 10.2%는 교사의 질을 선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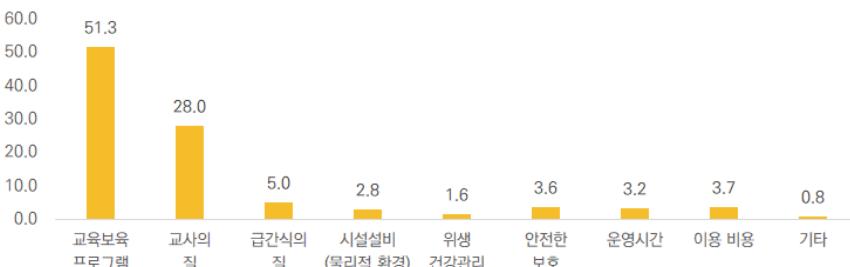
[그림 11] 공공형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차이나는 영역



▶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34.3%는 어느 정도 우수, 63.4%는 매우 우수하다고 답하여 대부분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일반 민간·가정 어린이집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으로, 교육·보육 프로그램 51.3%, 교사의 질 28.0%, 급·간식의 질 5.0%, 이용 비용 3.7%, 안전한 보호 3.6%의 순임.

[그림 12]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 가정 어린이집보다 우수한 영역



라. 공공형어린이집 이용 관련 의견

- ▶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 97.3%가 계속 보낼 계획이라고 답함.
- 기관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31.3%는 연령 진급으로 해당 연령반이 없어서, 12.5%는 교육·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6.3%는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등)에 대한 불만족을 꼽음.
- ▶ 자녀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선호하는 기관 유형으로, 국공립 유치원이 50.0%, 사립유치원 25.0%, 국공립어린이집 18.8%, 민간어린이집 6.3% 순임.
- ▶ 현재 다니고 있는 공공형어린이집을 주변 지인에게 소개하거나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20.7%는 어느 정도 있음, 77.9%는 매우 많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이 소개 또는 권유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공공형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음이 55.8%, 어느 정도 있음이 38.1%, 별로 없음이 5.7%, 전혀 없음이 0.4%의 순으로 나타남.
- ▶ 정부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매우 많음이 82.1%, 어느 정도 있음이 17.1%, 별로 없음 0.6%, 전혀 없음 0.2%로 나타남.
- ▶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예라는 응답이 86.1%, 잘 모르겠음이 12.2%, 아니요가 1.7%임.
 -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60.1%, 기관 유형에 따른 보육서비스의 질 차이를 없애야 하기 때문 39.2%, 기타가 0.7%임.
-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계속 보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의향 있음이 86.8%, 잘 모르겠음이 10.9%, 다른 곳으로 이동이 2.3%의 순임.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중단 시에도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계속 보내려는 이유로, 교사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가 49.7%, 현재와 동일하게 프로그램이 제공되기 때문에가 29.0%, 다른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이 어린이집보다 못할 것 같아서가 17.3%, 기타가 2.2%, 주변에 옮길 만한 어린이집 없음이 1.7%의 순임.
 -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중단 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이유로, 정부지원 중단 시 보육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돼서가 74.1%, 부모 부담 비용이 늘어날 것 같아서가 18.5%, 정부지원 중단 시 보육교사 이직 우려가 3.7%로 나타남.

4 정책 제언

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기준 완화

-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기본항목 중 일부 항목은 지정 기본항목과 지자체 자율평가, 운영기준이 증복되므로 지정 기본항목은 재정 지원의 안전성 및 운영의 투명성, 공보육 기관으로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함.
 - 현행 10개 항목 중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어린이집 정보공시 여부, 열린어린이집 운영, 누리과정 보조교사 최소기준 이상 채용 등 운영 관련 항목은 지자체에서 자율평가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함.
 - 부모부담보육료 추가 수납 금지 항목은 대부분의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3~5세 유아에게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 평가기준으로서 변별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삭제함.

▶ 공공형어린이집 지자체 자율평가 항목은 지역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 내 보육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함.

-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독립반, 통합반 등 운영 형태가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업이며, 본 연구의 공공형어린이집 조사에서도 불필요한 항목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으므로 지자체에서 이를 고려하도록 권고함.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 가능한 지표를 개발하여 안내함.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은 대폭 축소함.

-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우수한 부분으로 교사의 질과 교육·보육 프로그램을 꼽은 바 있어 보육교사 급여 기준과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필수 운영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도록 함.
- 평가 및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 등급 및 점수가 최상위등급, 90.00점 이상 항목은 평가제 개편으로 운영기준으로 적용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별도 기준을 마련함.

나. 공공형어린이집 지원단가 현실화

▶ 최근 최저 임금 상승으로 정부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단가가 지속 인상되면서 현장에서는 지원단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음.

- 공공형어린이집이 일반 민간, 가정어린이집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반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3~5세반 보육료 수입 수준으로 유아반 운영비를 3세반은 70만원, 4, 5세반은 80만원 수준으로 인상함.
- 유아반의 경우 3세반과 4, 5세반 반당 아동 수가 상이하나 보육료는 동일하므로 유아반 운영비를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만 3세반은 70만원, 4, 5세반은 65만원으로 인상함.

5 기대 효과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기준 개선을 통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진입 확대

▶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통해 운영의 효율성 확보

▶ 공공형어린이집의 공공성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

▶ 공공형어린이집 재정 지원 확대로 재정적 안정성 확보

참 고 문 헌

-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2018). 내부자료.
 - 보건복지부(2022).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 발표(12.13). 보도자료.
 - 양미선·김나영·장인수·윤소정(2024). 공공형어린이집 성과분석 및 발전 방안 연구: 유보통합에 대비한 역할 정립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진·이승학·오유정(2016). 공공형어린이집 관리운영 실태분석 및 품질제고 방안. 이슈분석 제20호. 한국보육진흥원.
-

양미선 선임연구위원 msyang@kicce.re.kr

2025 KICCE ISSUE PAPER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 현황과 제도 개선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04535 서울 중구 소공로 70 9층
www.kicce.re.kr